



플린 날씨...안개에 싸인 광주 도심 1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도심에 안개가 짙게 깔려 한 편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 혹한의 날씨가 풀리고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대기중에 수증기가 증가해 아침에도 안개 끼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8부 2처 18청

새정부 조직개편 가다
내주중 총리후보 인선

오는 18일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고 다음주 중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이 이뤄지는 등 박근혜 정부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인수위와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8부2처18청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이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에 경제 및 복지부총리 등 '컨트론타워' 탄생 여부와 중소기업청의 격상 여부도 관심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주 외부 일정을 취소하는 등 총리와 조각 인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내주로 예상되는 총리 인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초대 총리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 기존 비서실 조직 외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후보군에 대한 검증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자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호남 출신 인사를 총리로 기용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경제적 마인드를 갖춘 개혁적인 인사를 총리로 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올 F1 대회 적자 확 줄인다

정부 운영비 2배 늘려 100억 확보...특별교부세 추가지원 논의
박지사 개최권료 직접 협상·후원기업 찾기 총력전 "100억대로"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1700억여원에 달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적자폭 축소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운영비 지원폭을 2배 가량 늘린데다, 특별교부세 지원 등 추가 지원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올 F1 대회의 운영비를 1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린 데 이어 특별교부세도 지원을 고려하고 있고, 박준영 전남지사가 개최권료 인하 협상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F1 대회 개최를 위해 운영비 100억원 지원을 약속했고, 추가로 복권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해 150억원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추가 지원방향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지난해 F1 대회의 적자 400억원에 달할 때, 운영비 지원이 늘고 특별교부세 등 15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면 전체 적자폭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F1 조직위는 또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메인 스폰서와 광고·협찬 등을 논의하고 있어, 대기업을 후원이 이뤄진다면 적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최근 전남도는 500억원에 달하는 F1 개최권료 재협상을 위해 F1 운영사인 FOM(포뮬러원 매니지먼트)과 광범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 박 지사가 직접 나서 재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개최권료 인하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FOM측에 서면으로 전달했고, 재협상을 위해 박 지사가 조만간 FOM의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학적인 개최권료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 전남도는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고, FOM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남지사가 영국을 방문하면 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누적 적자가 수천억원대에 이르고, 남은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개최권료 인하가 필수적인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재협상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운영비와 특별교부세 250억원 지원과 개최권료 인하, 기업체 후원과 협찬이 뒤따른다면 F1 한국대회의 적자는 100억원대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비시즌 경주장 임대 수입과 경주장 광고 등을 늘린다면, 적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공약 구조조정 걱정

인수위 선별 고심...재원확보 요원 후순위 밀릴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지역공약 105건의 구체적 실행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지역의 대선공약도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 지역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적인 예산이 요구되는 만큼 현 재정여건으로는 상당수 공약의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기초연금 지급·초등학생 운동일학교·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의료·복지 공약에 조(兆) 단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역공약들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 명시된 지역공약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별로 7개씩 총 105개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국책사업의 성격이 강한 각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다.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경인고속

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 수서발전(發) KTX노선 의정부 연장,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부산~고창대교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대형 SOC사업들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들이다.

특히 일부 사업은 구상단계로 사업 계획 등이 미흡한데다 지역사업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 해 소요예산의 추정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나마 예상 사업비를 7개 공약사 12조5738억원으로 제시한 광주시를 평균으로 삼아 15개 시·도를 단순 대입해 보면 지역공약 사업비는 190

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박 당선인이 지역공약을 제외하고,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5년치 소요재원으로 제시한 131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과 관련해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서 지역공약 재원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역사업은 주로 SOC 사업이라 정부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는 일부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진표기자 hucky@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300 Elegance, E300 Avantgarde Sports Package
24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광신대학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3년 2월 8일(금)
입학문의 062)605-1112
문의 062)605-1023

www.hpdynastycc.co.kr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함평 다이너스티CC

친환경 나비고장 함평에 오시면
사계절 푸른 양잔디, 한쪽의 수채화 같은 함평 다이너스티가
여러분의 삶에 여유로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겠습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 061-320-7700 · 7777